

“충남 천안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면서 이동제한에 걸렸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주일이상 이동이 제한되면서 오리를 출하하지 못해 A씨는 발만 동동 굴렀다. 정밀검사 결과 AI 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했다. 이동제한은 풀렸지만 A씨가 받은 피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상해주지 않았다”

야생조류 분변검사 - 항원 검출 '이동제한'

발 묶인 농가들 '아무런 보상도 없다'

이것은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매년 야생 조류의 분변 검사로 이동제한에 걸리는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바이러스 음성 결과가 나오면 이동제한은 풀리지만 방역대 해제 후에도 해당 농가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 입식을 하루 앞두고 오늘 바이러스 항원 검출로 발이 묶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루 하루가 돈인 오리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I 보상의 사각지대, 원성이 자자한 오리농가들의 불만을 들어보자.



야생조류 AI항원 검출 14건 ‘모두 저병원성’ 방역대 종오리농장 종란 5일가량 묵혀 부화율 저하로 농장·관련업체까지 피해



AI 검사결과 나올 때 까지 농가 ‘STOP’

올해 야생조류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인 충남 천안시 북면 연춘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역본부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가 행해졌다.

10월 21일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충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 시료를 채취한 시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설정했다.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방역 지역 내 모든 닭과 오리 등 가금농가에 대한 신속한 예찰과 검사가 실시됐다.

10월 27일 최종검사 결과 AI 바이러스가

음성인 것으로 확인 됐다.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지역에 설정된 방역대를 해제했다. 정부의 조치는 이것으로 끝이다. 일주일 동안 방역대로 발이 묶인 가금 농가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야생조류에서 AI 항원 검사

야생조류 검사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실시된다. 텃새, 철새 등 야생조류의 분변과 폐사체를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역본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병성 감정기관과 지자체는 rRT-PCR 결과 H5와 H7 양성 또는 종란 접종 후 고병원성 AI 양성이 나오면 검역본부에 확인 검사를 의뢰한다. 분변검사는 총 8,160건으로 연중 시행된다.



지난 11월 26일 기준으로 야생조류의 AI 항원 검출이 된 사례는 총 14건이다. 14건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즉 고병원성 AI가 아닌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14건의 AI 항원 검출에 따른 최종 확인까지 14군데의 방역대에 해당되는 가금 농가들의 발이 묶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까? 현행법으로는 이 농가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종란 5일 묵히면 부화율 ‘뚝 떨어져’

H5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병천천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최종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10월 27일까지 5일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가 시행됐다. 해당 지역내 한 종오리농장은 이동제한으로 매일 납품받아야하는 종란을 5일가량 묵혀뒀다. 때문에 부화율은 뚝 떨어졌고 해당 종오리농장 뿐만아니라 해당업체의 피해까지 가중됐다.

또 육용오리의 경우 입식 1주일전 입식신고 절차가 있는데 철새 분변에서 H5항원이 검출돼 갑자기 이동제한 됨에 따라 해당 농가 입식이 지연되고 때에 따라서는 새끼오리를 폐기해야만 하는 피해까지 발생한 것이다. 출하를 앞두고 있다가 이동제한에 걸릴 경우에도 출하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없다.

야생조류 AI 항원(H5/H7형) 검출내역 (11.26일 기준)

총 14건(저병원성 14건) * 분변 14건

구분	시료 채취일	시도	시군구	하천 등	검사결과(확진일)	병원성	검사기관	시료
1	10.10	충남	천안	봉강천	H5N3 (10.17)	저	검역본부	분변
2	10.15	충남	아산	곡교천	H5-H6, N1-N3 혼합 (10.21)	저	환경과학원	분변
3	10.16	충북	청주	무심천	H5N3 (10.22)	저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분변
4	10.16	충북	청주	보강천	H5N3 (10.22)	저	충북 동물위생시험소	분변
5	10.22	경기	안성	청미천	H5N3 (10.28)	저	환경과학원	분변
6	10.23	경북	김천	김천	H5N3 (10.29)	저	검역본부	분변
7	10.28	강원	춘천	우두온수지	H5N3 (11.1)	저	환경과학원	분변
8	10.28	충남	아산	봉강천	H5N3 (11.4)	저	환경과학원	분변
9	11.4	경북	경산	금호강	H5N2 (11.11)	저	검역본부	분변
10	11.5	경남	창녕	우포늪	H5N3 (11.11)	저	검역본부	분변
11	11.5	전북	부안	동진강하류	H5 혼합 (11.12)	저	환경과학원	분변
12	11.14	충남	아산	곡교천	H5N3 (11.20)	저	환경과학원	분변
13	11.19	경북	김천	김천	H5N2 (11.26)	저	검역본부	분변
14	11.25	경북	김천	김천	H5N2 (12.2)	저	검역본부	분변

※ 미검출 2건 : 천안 병천천 1건, 경주 형산강 1건

보상체계 문제점 많아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의 AI 검사 및 보상체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야생조류 분변검사의 경우 전문 방역관이 아닌 방역본부의 일반 방역사가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채취하도록 돼 있어 채취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검사 이후 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종 검사결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방역지역 내 종사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철새에서의 항원 검출이 아닌 고병원성 AI가 실제로 발생하면 이동제한 시 방역지역 내 오리의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중에 있다. 그러나 해당 농장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종 오리장 및 부화장의 경우 종란과 새끼오리를 폐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 AI 발생지역산 가금의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오리의 입식이 지연되고 해당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

과도한 AI 검사 불만 쇄도

현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AI 검사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오리농장의 경우 출하 전 AI 검사 및 전체 축사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압장에 출하하는 물량 30%를 매일 정밀검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농가의 폐사체 시료와 도축장 AI 검사시료를 농가와 계열업체 직원들이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어 교차오염 등 또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AI 검사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오리협회는 이에 따라 현행 AI 검사 및 보상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열악한 오리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개편해나가면서 방역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역 정책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일방적인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역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육용오리 입식 지연으로 새끼오리 폐기

